
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보건복지부 | | 보 도 참 고 자 료 | |
| 배 포 일 | 2021. 9. 10 / (총 5매) | 담당부서 | 보육정책과 |
| 과 장 | 유 보 영 | 전 화 | 044-202-3540 |
| 담당자 | 이 승 목 | | 044-202-3541 |

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

-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고,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 -

-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오는 12월 9일(목)부터 시행될 예정인 「영유아보육법」(2021.6.8. 공포)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(금)부터 10월 20일(수)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·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,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,
 -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'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.

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】

-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첫째,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·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,

- 그에 따른 기준과 절차, 지정 취소 사유 및 지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제재 방안을 규정하고,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준수하여야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. (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의5~제32조의8)
- 둘째,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. (시행령 제17조)
- 셋째, 보육사업 관련 위법행위나 보육료 등을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·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모가 바우처로 결제하는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하였다. (시행령 별표 1의2)
- 넷째,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. (시행령 제6조)
- 다섯째,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* 대상에서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은 삭제하여 현실화하고,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하여 늘어나는 시간제 보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. (시행규칙 제35조의5)
 - * (사전 예탁) 시군구는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미리 보내고, 이후 수행기관에 지불
- 여섯째,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,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, '일시 보육'을 '시간제 보육'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하였다. (시행령 별표 1)

- 마지막으로,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,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는 증명 사진을 온라인 신청의 경우 파일 첨부로 같음하도록 하여 보육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하였다. (시행규칙 제5조 및 제18조)
-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.
 -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1년 10월 20일(수)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**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.
 -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(홈페이지) (www.mohw.go.kr) → 정보 → 법령 → “입법·행정예고 전자공청회”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 의견 제출방법(우편) >

○ 제출처

- 주소: (30116)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KT&G 세종타워 B 13층
보건복지부(별관) 보육정책과
- * 전화: (044) 202 - 3542, FAX : (044) 202 - 3973

○ 기재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법인·단체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

<붙임> 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

<별첨> 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

붙임

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

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

- (법 개정사항) 공공형어린이집 지정·재지정 및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
- (시행령 개정사항)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·재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
- (시행규칙 개정사항)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, 재지정, 운영기준, 지정취소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

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근거 마련

- (법 개정사항)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
- (시행령 개정안)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규정함

☐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

- (법 개정사항)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보조금 외 ‘무상보육비용(부모부담보육료)’을 추가하여 포함
- (시행령 개정안)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·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을 기존 ‘보조금’ 뿐만 아니라 ‘무상보육비용’을 포함하는 부정 사용 비용 전체로 확대

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

- (시행령 개정안)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 → 20명으로 확대

□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 변경

- (시행규칙 개정안)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이 가능한 범위를 무상보육 비용과 양육수당에서,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을 삭제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

□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

- (시행령 개정안) 비고 내 경력기준에서 ‘일시 보육’을 ‘시간제 보육’으로 개정하고, 교사의 범위에 ‘기간제교사’를, 특수학교 교원의 범위에 ‘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, 순회강사’를 추가하며, 한국보육진흥원에서 6급(또는 6급에 준함) 이상, 현장 평가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추가하는 등 경력 범위를 확대

□ 보육교직원 제출서류 편의 증진

- (시행규칙 개정안)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서류를 지자체에서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,
 -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을 온라인 신청의 경우 파일 첨부로 같음하도록 하여 편의를 증진

□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의 근거 마련

- (법 개정사항)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고 및 제재 규정 마련
- (시행규칙 개정안)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인 위생관리기준 위반에 “법 제33조의4”를 명시하여 법령상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